

네트워크 회의
-국내인권도시 인권옹호자 워크숍

“지역사회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과 확산방안“

조혜진
[한국, 금천구 인권위원회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의 보호 아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과 시민사회에서도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상당한 정도의 인권보장시대에 살고 있고 학교나 회사에서 인권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고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들, 또는 보수 개신교의 반대운동 등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인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말하면서 앞서 말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에 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람,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후원을 하면서도 2018년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관념적인 인권과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인권,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인권의 문제가 조금씩 다르다.

2020년 봄에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보니 총60명의 응답자 중 90%가 금천구에 거주하며,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30~50대 여성이다. 설문 결과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권교육, 인권침해 경험, 매스컴, 일상생활 순이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근접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존엄, 권리, 평등, 차별 순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근접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성소수자, 여성 순이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는 보통, 25%는 잘 보장되지 않는다, 5%는 잘 되는 편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성소수자 관련, 이주노동자 관련, 장애인과 아동 관련 순이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 중 기억에 남는 인권침해 이슈로는 성소수자 관련(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포기 사건, 성전환자 군대 강제 전역 사건)이슈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아동성폭행, 원영이사건, 창녕 9세 여아 탈출사건, 천안 캐리어 감금 아동 사망사건), 장애인 관련(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주노동자 관련(수많은 이주노동자 폭행, 임금체불 사건), 여성 관련(성폭행, 미투), 난민 관련(제주 예멘 난민입국), 기타(세월호, 코로나19 감염자 명단공개와 역학동선공개, 생활고 비관 자살, 살인범 신상공개, 염전노예, 4·19) 이슈 순이었다. 응답자의 40%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아동이 무시당할 때, 성별·연령·학력·지위로 차별받았을 때라고 답했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가장 힘써야하는 주체는 정부, 주민스스로, 지자체와 학교, 가정, 시민단체 순으로 높았고 인권관련기관과 종교기관이 가장 낮았다.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83.3%가 인권교육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권 조례제정, 평등기본법(차별금지법), 인권관련 이벤트라고 답했다.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연4회(43.3%), 매월1회(35%), 연2회(18.3%), 연1회(3.3%)라고 답했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이렇다. 인권에 관심을 갖게 준된 계기는 인권강의고, 인권증진 및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 지자체 학교가 애써야 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며 교육 횟수는 연4회 이상이 좋다. 물론 이 설문 특성상 온라인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설문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구 24만 명의 금천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최소 6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이들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인권에 관한 담론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인권에 관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주민들의 소소한 대화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발전해왔다. 이 설문에 참여한, 그리고 지금도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중 2017년에 시작한 금천구의 ‘주민인권배움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인권’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또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제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삶의 터전에서 인권 담론들을 만들어가며 동네를 바꿔나가는지 살펴보자.

1. 인권교육 (주민인권배움터)

2017년 가을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에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강의실에 모여 총 8회차의 인권강의를 들었다. 인권감수성교육, 세계인권선언 교육, 지자체 인권정책 사례 등 폭넓은 인권 강의를 들었다. 2017년에 27명의 주민이 수료했다. 2018년에도 한 차례, 2019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주민인권배움터가 개설됐다. 매해 커리큘럼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4차례의 주민인권배움터를 모두 수강한 주민도 있다. 주민인권배움터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의 기본 가치는 물론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접하고 또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함께 수강한 주민들은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이루어간다. 금천구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인권배움터는 금천구청에서 주최하는 주민인권배움터이다.

2. 공유 (인권독서동아리)

나에게 인권은 저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자각하지 못 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나 자각을 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한 분들, 때로는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해서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고단한 하루하루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해 얘기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함께 하는 동아리 형식의 공부가 필요했다. 나는 인권에 대해 더 배우고 늘 생각하기 위해 주민인권배움터 1기 수료생들과 함께 인권독서동아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그 분들과 함께 2018년부터 3년째 금천구에 유일한 인권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고등학생, 공익근무요원, 마을신문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교사, 30-40대 주부, 50대 아저씨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매주 1권씩 인권 관련 책을 읽고, 월요일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동네의 공유공간에 모여 각자 읽은 소감을 얘기하거나 책 속의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첫 해에는 매주 책을 읽었고 작년에는 한 주는 책읽기, 한 주는 인권영화를 함께 봤다. 매주 어떤 책을 읽을지는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2018년 당시 금천구청 지역혁신과 인권담당)

안시형 주무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아리 멤버들이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알아본 뒤 모여서 함께 정한다. <불편해도 괜찮아>, <인권을 찾아서>, <송곳>, <벼랑에 선 사람들>, <별별 차별>,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가>, <진실유포죄>,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말이 칼이 될 때>,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등의 책을 읽었고 <더 포스트>, <언터처블 1%의 우정>, <써프러제트>, <웰컴 삼바>, <행복까지 30일>, <어른이 되면>, <노예 12년> 등이다.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인권독서동아리에서는 2018년 12월 인권의 날 기념으로 금천구청 앞에서 인권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각자 생각하는 인권에 관한 구호를 적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인권은 ___다.'라는 큰 피켓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메모지에 써서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장 관심 있는 인권분야(자유권/사회권/환경권/ 기타)는 어떤 것인지 투표하기,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경우는 어떤 때인지 써보도록 했다. 이때도 인권담당 주무관의 도움이 있었다. 인권분야를 크게 4가지로 나눠주고 함께 피켓을 만들었다. 그 해 겨울에 가장 추웠던 날이었는데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다.

금천구에는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마을공동체들이 모여 자축하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에서 금천구 인권독서동아리는 신규공동체상을 받았다. 인권독서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었다. 왜냐하면 인권에 관해 얘기하는 인권독서동아리를 주민인권배움터가 개설되기 3년 전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늘 소망하고 있던 동아리를 주민인권배움터를 통해 하게 됐고 1년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인권관련 책을 읽어온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

3.공유 (학부모 모임)

2018년에 인권독서동아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학부모들과 만날 일이 많았다. 마침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인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금천구에는 회원 40여명 정도 되는 초·중·고 학부모회장 연합회가 있다. 이들은 몇 개 학교씩 연합해서 학부모연수를 함께 하곤 했는데 어떤 주제로 연수를 할지 정할 때 나는 인권을 주제로 연수를 하자고 했고 투표를 거쳐 2개를 선정했는데 인권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들과 함께 몇 차례 인권관련 독서도 하고 몇 차례 인권 영화보기, 인권강의 2회, 인권탐방도 진행했다. 금천구 주민인권배움터에도 오셨던 조효제 교수님과 홍성수 교수님의 강의를 학부모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고, 서울시 인권현장탐방으로 민주화 6월길을 함께 돌아봤다. 민주화 6월길은 6.10 민주항쟁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코스인데 (옛)남영동 대공분실-서울역 광장-대한성공회 서울성당-서울시청 앞 광장-향린교회-한국 YWCA-명동성당으로 구성됐다. 인권탐방은 학부모 뿐 아니라 금천구 관내 초등학교 교사, 초등 방과 후 코디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가서 더욱 뜻깊었다.

4.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 기본 조례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정할 것을 2012년, 2016년에 권고했다. 금천구에서도

2019 금천구 주민 인권배움터를 수료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정책과 서울시 인권조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2달여 기간 동안 18개 조문을 직접 토론하고 비교, 검토하며 금천구 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나갔다. (주민,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공무원으로 인권조례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인권조례추진단 활동을 한 주민들은 모두 주민인권배움터 수료생들로 구성됐다. 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기본지식과 인권감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완성되고 2019년 10월 입법예고 중에 금천구청에는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항의 민원이 폭주했다. 총 339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고 그 중 금천구 주민은 6명이다. 찬성은 461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금천구 주민은 341명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원 중 대부분이 반대 의견인데 금천구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그렇게 되는데는 주민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인권조례제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금천구 주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주민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인권 조례 제정 찬성 서명운동을 벌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 서명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서명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구의회 심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주민이 같이 가야 하니까 반대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에 인권교육이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어렵지만 조례제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서명운동을 할 때 주민인권배움터에서 함께 배운 주민들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찬성 서명을 해주었다. 나는 금천구 주민들이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2월 17일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던 날, 금천구 인권독서동아리 주민들은 구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온 구의원들 10명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건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준 주민들과 그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는 의미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소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다. 개인의 입장은 찬성인데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반대표를 던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넸다. 현재는 인권조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대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인권이 보장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의원들의 인권감수성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구의원들과 주민들은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가야 하는 존재다.

5. 인권에 관한 기록 (마을의 인권에 관한 주제 기록)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마을기록관 운영지원단을 하던 나는 주무관과 주민을 인터뷰했고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글로 써서 마을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마을신문 금천in에서는 이 글을 기사로 실어주었다. (심지어 2면이다. 금천구에는 6개 정도의 마을신문이 있다. 그 중 가장 신뢰받는 신문이 '마을신문 금천in'이다. 이 글을 계기로 나는 지금 마을신문 금천i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널리 알렸고 여러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다. 그 중 '뉴스앤조이'라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는데 그 때 담당 주무관은 조례제정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한 양슬기씨와 나를 불러 함께 인터뷰하자고 했다. 행정의 입장에서 간단히 인터뷰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함께 한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일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금천구에서 인권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의미 있는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배움과 의미 있는 행동의 발단이 된다.

6. 인권에 관한 끊임없는 담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감대)

금천구는 2019년 1월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 예산으로 2020년부터 중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등학교 신입생에 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 학생은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금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교복 관련 업무를 하는 교사 조남규씨가 외국인 학생이 교복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 4월이다. 조씨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산세, 소득세 다 내는데 필요할 때만 동포라고 불러서 일 시키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올 봄에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나? 우리 애가 이 사실을 듣고 말이 없어졌다.”

조씨는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고 다문화교육을 하면서 외국인은 교복지원에서 배제시킨다면 교육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금천구의 뜻있는 사람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개정 서명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마을신문 금천in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교복지원 사례 등을 검토했다. 영주권자/ 영주권자격자/ F2/ F4/ F5/ H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국적자가 있다. 안산시에도 교복지원조례가 있는데 안산시 조례에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서울에 마포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구에도 교복지원 조례가 있는데 전부 금천구처럼 외국 국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구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까지 확인한 지자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가평군과 안산시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교복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조례상으로는 내국인만 대상이나 실제로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와 경남 사천시가 그 경우다.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중구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화군, 광주시, 연천군, 이천시 등이다.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이후 금천구의회의 의원들을 만나 조례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구의회는 6월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예산을 추경해 외국 국적의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교복지원에서 배제되었던 80여 명의 외국 국적 학생들도 교복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것은 금천구에서 일하는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어느 교사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교사와 함께 한 주민들(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있었기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차별받던 학생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금천구 주민들은 끊임없이 인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어왔다. 때로는 주민 스스로 해결

해 나가고 때로는 행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평소에 인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인권을 배우는 것과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권 교육이나 토론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 결론 ***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동아리, 학부모연수 등의 소그룹 인권연수, 마을기록 등의 의식 있는 주민들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필요하다. 조직화된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서의 주민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 역량을 키워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의 의지가 강해도 행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주민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워가는 이러한 활동을 행정이 지지해주고 주민과 행정이 협력했을 때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인권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민이 차별받지 않으며 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는다. 또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주민의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권도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주민과 행정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은 어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할 대상이다. 함께 가야 한다. 정책을 고민할 때 주민과 행정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데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인권이라는 것은 비가 오는 날 비를 맞는 정수리와 같다고 했다. 얼굴이나 손으로는 금방 느낄 수 있지만 정수리가 젖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빠른 변화는 없지만 슬그머니 다가오고 슬그머니 좋아지는 것이 인권이라고 했다. 사람은 등잔 밑을 보기 어렵다. 남이 어렵게 되는 것은 쉽게 보지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NAP(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 기준 사회적약자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의 불편이 보일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불편에 대해 공감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